

##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홍 익 표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Tel; 3460-1041)

정 승 호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two@kiep.go.kr, Tel; 3460-1055)

### 주요 내용

-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7. 4)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최근 대미·대일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 시점에서 대북대미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하여 미국일본의 강경책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명분이 약화되고, 그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일부 대북 관련 사업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중순경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할 경우 한반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정기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에 북한측의 강경대응이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강경대응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음.

## 1.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의도

■ 북한은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음.

- 미국의 독립기념일(7. 4)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

-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최근 대미·대일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 금융제재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통한 압박 △양자간 대화의 거부 △동북아지역의 MD 체계 구축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기존의 대북 봉쇄 및 고립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행동을 보여 왔음.
- 일본 역시 2차에 걸친 정상회담 및 평양선언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유예와 일본인 납치문제의 사과 및 송환 등의 긍정적 결과를 얻어냈으나, 오히려 △일본인 납치문제의 확대 재생산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제재 강화 △총련계 단체에 대한 탄압 및 규제 확대 등 대북 압박과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음.
- 북한은 ‘유화정책’을 통해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하려고 했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도리어 미국과 일본이 대북 강경책의 효과성을 선전하는 데 활용되었고 북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이 시점에서 대미·대일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해서 미국·일본의 강경책에 정면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의 배경에는 강경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북한측의 강경입장이 작용하였음.
-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일본의 강경제재는 물론,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 및 경협사업 위축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임.
- 북한 당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군사력에 기초한 강경대응의 최종결과가 유화정책에 의한 협상결과보다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북한이 처한 현실에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나 불이익에 의해 더 이상 나빠질 게 별로 없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 북한 당국의 의도

-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화거부에 대해 이제는 ‘대화를 구걸하기’ 보다는 무력행사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스스로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조치로 볼 수 있음.
- 즉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과 체제전복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부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미국내 다른 세력 또는 차기 정권과의 대화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음.
- 둘째, 최근 부시 정부가 이란 핵문제, 중남미의 차베스 정권을 비롯한 좌파정부의 득세, 이라크 분쟁종식 등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무시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북한문제 해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글상자 1. 북한의 미사일 관련 주요 일지

- 1975. 중국에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 1984. 스커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 1985.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
- 1989.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
- 1993. 5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사거리 1천300km 추정)
- 1998. 8 '대포동 1호' 발사(북한에서는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천800~2천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 1999. 9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 2002. 9 북·일 정상회담의 평양선언에서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
- 2003. 2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 2003. 3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 2003. 4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km의 실크웬 미사일 시험 발사
- 2003. 10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웬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2005. 3 외교부 비망록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사이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
- 2005. 5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2006. 7 '대포동 2호' 포함해 미사일 7발 발사

- 셋째, 북한의 군사대비 태세를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등의 체제전복 시도나 실력행사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임.
- 넷째, 북한 내부에서 최근의 경제개혁, 대마대일 유화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군부나 보수강경파 등의 반발을 무마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임.

## 2.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각국의 반응 및 향후 전망

### 가. 미국

-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자국에 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6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만일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며, 정말로 도발적인 행동” 라고 발언한 바 있음.
-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법적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및 비난결의를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의장서명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북한의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시에도 안보리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끝난 경우가 있음.
- 또한 미국은 기존 다자협력틀인 6자회담 내에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부시 대통령은 7월 5일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핵과 함께 미사일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풀려고 한다”며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 지도자에게 한 목소리를 내야하며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함.
- 다자간 협력과 함께 양자간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내부 여론이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므로 양자 협상을 통해 미사일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음.

## 나. 일본

- 일본은 미사일 발사를 ‘2002년 평양선언’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영해 근처인 홋카이도 해역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요구로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5일 오전 UN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었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음.
- 초안에는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복귀 촉구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 화물선인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6개월간)한다는 경제제재조치를 미사일 발사 직후 발동함.
- 향후 대북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MD 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발표된 제재 조치로는 △주일 북한 외교관의 출국 뒤 재입국 금지 △북한선적 선박 입항시 승무원의 상륙 금지 △일본기업의 대북한 수출 엄격관리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입국 중지 △일본 국민의 북한행 자숙 요구 △북한전세기의 일본 입항 등 9개항의 제재 조치를 발동함.
- 향후 제재의 수위를 높여 △개정 외환법을 통한 조총련계 등의 대북한 송금 금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유의 북한 금융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미사일 방어계획(MD) 관련 연내 배치 예정이었던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 (PAC3)을 이달 중으로 배치할 예정(『도쿄신문』 7월 3일자)이며, 향후에도 MD 관련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 중국

- 미사일 발사 철회를 여러 경로로 설득했던 중국 당국은 북한의 전격적인 미사일 발사를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6월 23일 요미우리와의 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6월 27일 베이징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동북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북한에 발사 포기를 적극 설득했음을 시사했음.

- 중국은 7월 5일 저녁에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관련국들이 냉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함.

- 류젠차오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모든 관련국이 침착하게 냉정함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북미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 일본간 미사일 방어협력(MD)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있음.

- 6자회담 의장을 맡고 있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6월 11일부터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방북기간 동안 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라. 러시아

-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발사 직후에는 미사일 발사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비난성명을 발표함.
  - 러시아는 6월 22일 이례적으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거나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음.
  - 미하일 카미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5일 발표된 공식성명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도발에 해당한다”며 북한을 비난함.
-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7월 5일 안보리 회의후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이 입안한 대북 결의 대신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함.

## 마. 기타 국가

- EU,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등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발사유예 선언 준수 및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함.
  - EU 외교정책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복잡한 상황에 빠진 동북아시아에 상당한 긴장을 가중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함.
  - 프랑스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이 지난 1999년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선언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영국 외무부도 7월 5일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독일 정부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비난성명을 발표함.
-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북한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함.
-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3.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가. 정치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재연
  -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을 둘러싼 남한사회 내에서의 찬반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일부 보수 정치세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북 지원 및 경협사업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의 근본적 원인과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책임논쟁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사회단체 및 전문가들 간의 논란 및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임.
- 대북정책의 정치권 쟁점화 가능성
  -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논쟁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특히 7월 26일 국회의원 재보선거에서도 대북정책의 성과와 방향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음.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정책의 추진명분이 약화되고 성과와 방향에 논란이 확산되면서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일부 대북관련 사업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나. 경제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5월 중순경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식시장 소폭 하락
  -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월 5일의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6.07 포인트 떨어진 1279.85에 거래를 마쳤는데, 개장과 함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북한 미사일 문제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가지수가 안정을 회복하였음.
  - 7월 6일의 코스피 지수도 전일대비 15.89포인트 하락한 1263.96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유가급등, 미국 증시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환율도 소폭 상승
  -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7월 5일의 경우 전일대비 달러당 3.30원 오른 946.70원으로 거래를 마침으로써, 미사일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7월 6일에도 환율은 전일대비 2.80원 오른 949.50원을 기록하였지만 미사일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외평채 가산금리 상승
  - 국가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7월 5일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고, 7월 6일 미국 뉴욕시장에서는 다소 상승하였지만 국가신용도의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행에 의하면 7월 5일 3시 기준으로 홍콩시장에서 만기 14년물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재무부 채권기준으로 0.81% 포인트를 기록, 미사일 발사실험 전날과 변화가 없었음.
- 그러나 7월 6일 뉴욕시장에서는 2025년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가 99~100bp<sup>1)</sup>에 거래되면서 4일의 97bp보다 2~3bp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경제안정 효과

- 북한 미사일문제는 발사 이전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여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도리어 발사 이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른 경제안정 효과가 예상됨.
- 또한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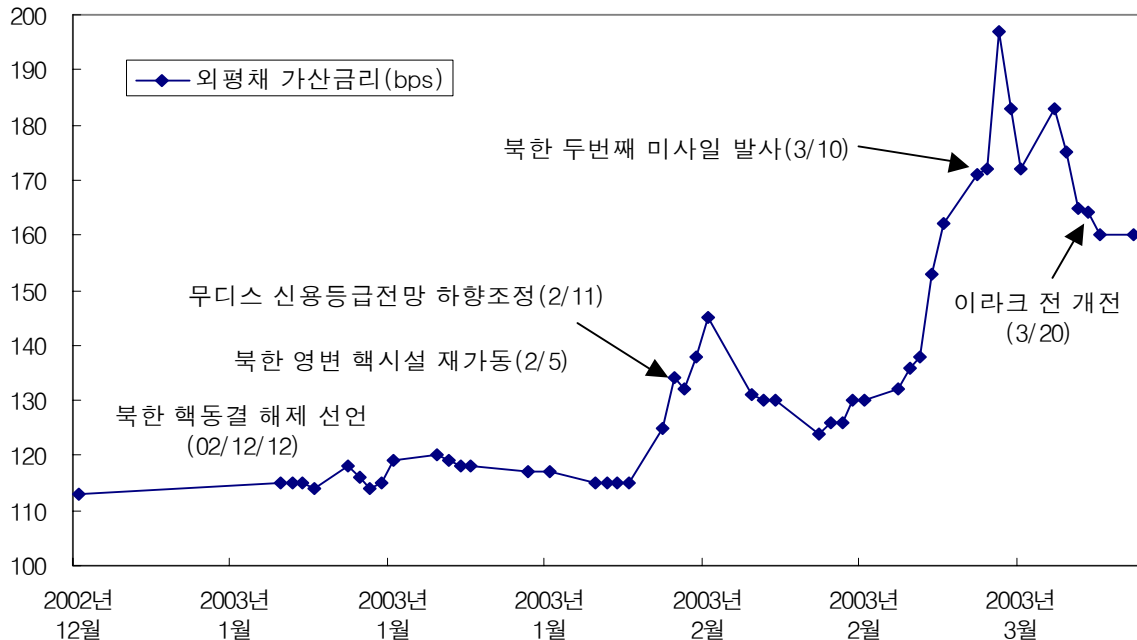
#### ■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책 및 제재조치에 따른 시장불안 요소 상존

-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미사일 발사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을 발표할 경우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반도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임.
- 지난 2002년에 촉발된 북핵위기는 당시 한국의 국가위험도를 상승시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북핵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2월~4월 동안 외국인은 총 2조 3천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하였음.
- 당시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상황이 노출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음.
-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에서도 외국인의 이런 성향은 확인되는데 북핵위기 발생 이전까지 평

1) bp(Basis Point)는 100분 1% 포인트

균 103bp<sup>2)</sup>를 유지하면서 외환위기 극복 이후 줄곧 안정세를 유지하던 가산금리가 북핵위기 발생 이후 197bp<sup>3)</sup>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1.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 다. 대외관계

### ■ 대북정책에서의 미국의 입지 강화와 한국 정부의 명분 약화

-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초에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접근방법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강력한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측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해체와 인권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북한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임.
- 한국은 경제협력과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의 투명성 확보 및 평화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2)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평균치

3)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해제를 선언하였고 이후 가산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3월 10일 이틀 뒤인 3월 12일 197bp까지 급상승함.

-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명분과 동력은 약해진 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으로 인해 대북정책 추진에서 미국의 요구와 방법을 한국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 대북정책 공조에 따른 한·일간 갈등요소의 잠복

- 독도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및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최근 갈등이 확대일로로 걸어왔던 한·일간 갈등요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단 수면 밑으로 잠복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협력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남북협력을 동시에 고민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선택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향후 한·일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일본의 주요 정치세력 및 우익단체들이 북한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평화헌법개정, 군대보유, 군비확장 및 사회 전체의 우경화에 활용코자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북·일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 대북정책에 관한 한·중협력의 확대 필요성 제고

- 미국, 일본의 대북 강경책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 특히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협력확대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라. 남북관계

#### ■ 남북관계의 경색 가능성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정 기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북한측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는 '강경대응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위축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 및 지연 전망

- 정부의 대북 비료 및 쌀 지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중단 또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남한내 여론과 미국과의 공동보조 등을 감안할 때 지원중단의 가능성의 높지만, 남북관계 전반과 향후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원중단보다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임.

#### ■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은 위축, 민간부문의 경협사업은 자율적 추진 전망

-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남북경협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정부 당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협사업들은 위축 내지는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최근 경추위에서 합의한 철도의 시범운행이나 경공업 및 광업부문의 남북협력 등을 비롯하여 정부가 남북경협의 신동력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업협력,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관광협력 등과 같은 신규 대형사업의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들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고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개별 사업주체의 자율적 판단하에 큰 변화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활발하게 생산활동 및 공단조성이 진행중인 개성공단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민간부문의 경협사업에 정부의 지원축소, 규제강화 등과 같은 일정한 제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 북한측의 대남관계 예상 반응

- 한국 정부의 대북 비난 성명 및 인도적 지원의 중단보류 등에 대해서 북한측은 일단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조치로 우선, 당국간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당국간의 회담은 중단한 채 민간부문과의 연대나 교류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한국의 민간부문 단체들에게 ‘민족공조 노선’ 으로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수준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한 당국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비롯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대응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미사일 발사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임.

## 4. 한국의 대응전략

#### ■ 첫째,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 북한 미사일로 인한 위기 고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과 한반도 지역의 평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해야 함.

#### ■ 둘째, 대북정책 추진에서의 유연성을 발휘

- 대북포용정책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에 대한 적절한 상응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임.

-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정기간 모든 당국간 회담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표시할 필요성도 있음.
- 그러나 비료쌀 등의 지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조건없이 이행(시기는 조절)함으로써, 남북간 대화가능성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 한반도 지역은 마일중러 등 주변 4국간의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고 있으며, 냉전적 요소도 잔존하고 있음.
- 미국, 일본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봉쇄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이번의 미사일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위기해법과 국제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넷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

-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극단적으로 대치되어 왔으며,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음.
- 따라서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표출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책협조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정당 지도자, 국가원로급 인사들간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정치권 내에서의 정책협조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설득,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